

# 소상공인 위한 '제4인뱅' 재추진 수익·건전성 확보가 성패의 핵심

## 금융권, 제4인뱅 논의 본격화

“은행, 개인사업자 개인신용 평가 ‘소호 스코어’ 같은 평가체계 필요”

최근 정치권에서 개인사업자 대출 확대를 위한 ‘제4인터넷전문은행’ 논의가 다시 부상한 가운데 수익성과 건전성 확보가 성패를 가를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지난해 금융당국 예비인가 과정에서 자본력 한계가 드러난 만큼, 안정적인 수신 기반 확보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사업계획 심사 기준을 강화하고 총량규제를 보다 정교하게 운영해 건전성 리스크를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제4인터넷전문은행 논의는 소상공인과 중저신용자 등 금융 사각지대 해소 필요성에 힘입어 본격화됐다. 국내 소상공인은 약 554만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약 20%를 차지한다. 이들의 금융부채는 약 1000조원 규모로 추산되며, 이 가운데 은행권 대출만 약 460조원에 달한다.

### ◆ 소상공인 금융 공백 여전

인터넷은행에 도전하는 곳은 소상공인을 위해 네번째 인터넷은행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인목 한국신용데이터 이사는 “현재 은행은 개인사업자를 사업이 아닌 개인 신용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사업 데이터 기반의 ‘소호 스코어’와 같은 새로운 신용평가



Chat GPT로 생성한 이미지.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인터넷은행의 지난해 여신 성과를 보면 가계대출 중심 편중현상이 심화됐다. 인터넷은행 3사의 여신 가운데 90%는 가계대출에 집중돼 있고, 개인사업자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8%에 불과하다.

회사별 가계대출 잔액 규모를 보면 카카오뱅크는 43조80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케이뱅크(16조1000억원)와 토스뱅크(14조원)가 뒤를 이었다. 반면 개인사업자대출은 카카오뱅크 3조1000억원, 케이뱅크 2조3000억원, 토스뱅크 1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 ◆ 건전성·자본력 검증 우선

금융당국은 제4인터넷전문은행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초기 자본 조달의 안정성과 건전성 측면의 리스크 대응 능력이 충분히 입증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종진 금융감독원 팀장은 “은행은

안정성과 공익성이 핵심인 산업으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소비자 피해를 넘어 금융 시스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예비인가 탈락은 혁신성 부족이라기보다 초기 자본 조달의 안정성과 건전성 측면에서 리스크 대응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시점에서 필요한 특화 은행이 무엇인지, 시장에 미치는 영향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융위 역시 인가 재추진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제4인터넷은행은 금융 소외 계층에 대한 자금 공급 상황, 은행업을 영위할 수 있는 사업자의 적합성, 금융시장 경쟁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현재 인터넷은행 3사가 사회적 요구를 충족하고 있는지, 개인사업자와 지방 기업에 대한 여신 공급에 제도적 한계는 무엇인지도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작년 하반기 한국소호은행, 소소뱅크, 더존뱅크, 유뱅크 등 예비인가 신청업체들이 제4인터넷은행에 도전했지만 모두 탈락한 바 있다. 대부분 자본조달 능력 부문에서 의문이 제기됐다. 현재 로선 소상공인 전문은행을 내세우고, 전략적 투자자가 참여하는 컨소시엄이 유리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metro

## “중동 리스크 대응… 금융시장 모니터링”

### 금융위, 금융 비상대응 TF 회의

금융위원회가 ‘중동사태’의 지정학적 리스크 재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시장 리스크 요인을 대대적으로 점검하고, 시장 동향을 24시간 모니터링한다. 또한 피해가 우려되는 주요 산업을 대상으로 업권별 ‘탈레이 간담회’를 지속 개최해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발굴한다.

금융위는 13일 이석원 위원장 주재로 ‘금융부문 비상대응 TF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TF 회의는 미국과 이란의 휴전 합의가 불발하며 지정학적 리스크가 재확산하는 상황에서 금융시장 리스크 요인을 최소화하고, 범정부 차원의 비상대응체계를 공고히 하고자 마련됐다.

### 이석원 금융위원장

“명확한 종전 선언까지 긴장 유지  
시장 안정과 민생지원 등 추진을”

이석원 금융위원장은 “휴전 합의 불발로 우리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은 여전히 엄중한 상황이다. 후속협회의 여지가 남아있다고는 하나 명확한 종전 선언이 있기까지 긴장의 끈을 놓쳐선 안된다”라며 “현재 가동하고 있는 ‘금융부문 비상대응체계’를 철저히 유지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범정부 차원에서 현재의 비상대응체제를 엄중히 유지하기로 한 만큼, 앞으로도 금융시장 안정과 민생·실물경제 자금지원 등 노력을 빈틈없이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먼저, 금융시장반에는 중동상황에 따른 시장동향을 24시간 밀착 모니터링하며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시장안정조치를 즉각적이고 과감하게 시행해 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채권·자금시장 안정프로그램’의 지원규모 확대방안은 이미 마련된 만큼, 필요시 즉각 확대해



이석원 금융위원장.

/뉴스1

달라고 강조했다.

민생·실물경제 현장의 긴급한 자금이 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빈틈없이 지원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정책금융 지원프로그램’이 최근 추경을 통해 지원규모를 확대한 만큼 보다 적극적인 집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민간 금융권의 신규자금공급 등 지원상황도 면밀히 모니터링해 필요시 지원규모대상 확대 등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주요 산업 ‘탈레이 간담회’ 등 현장의 금융애로를 직접 청취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도 지속 발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 주 개최한 ‘건설업-금융권 간담회’에서 논의된 과제에 대해서는 신속히 검토조치 해달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금융산업반에는 실물경제의 리스크 요인인 금융산업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스트레스테스트를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당부했다.

이석원 금융위원장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금융시장의 안정을 지키는 것이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을 수호하는 핵심”이라며 “시장 참여자들이 정부의 대응의지를 신뢰할 수 있도록 모든 금융권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안승진 기자 asj1231@

## 美 ‘매파 기류’… 한은, 금리인하 여지 줄어

한은 “중동전쟁 영향으로 국내의 물가 상방·성장 하방 압력 증가  
연준 의사록, 선택지 좁히는 변수”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내부에서 다시 매파(통화긴축 정책 선호) 기류가 고개를 들면서 한국은행의 추가 완화 여지도 더 좁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은이 지난 10일 기준금리를 동결(연 2.50%)한 가운데, 연준 3월의 사록과 미국 기대인플레이션 상승까지 겹치면서 ‘빠른 인하’ 기대는 한층 힘을 잃는 모양새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연준의 3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은 미국 쪽 바람이 다시 매파로 기울고 있음을 보여준다. 연준은 공식 의사록에서 인플레이션의 상방 위험과 고용의 하방 위험이 모두 높아진 상황을 적시했다. 일부 참석자들은 물가 상방 위험이 현실화할 경우 정책 제약을 더 강화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고 봤다.

같은 시기 뉴욕연은의 3월 소비자대조사에서도 1년 기대인플레이션은 3.4%로 전월보다 0.4%포인트(p) 뛰었다. 단순히 ‘연내 인하가 늦어질 수 있다’ 수준이 아니라, 미국 내부에서 인플레이션 재가열에 대한 경계가 다시 또렷해졌다는 의미다.

이 대목이 한은에 더 무겁게 다가오



신현승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13일 오전 서울 중구 한화금융플라자에 마련된 인사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는 이유는, 한은이 이미 국내 변수만으로도 쉽게 움직이기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한은은 지난 10일 통화정책방향에서 “중동전쟁의 영향으로 물가 상방압력과 성장 하방압력이 증대됐고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됐다”고 진단했다.

원·달러 환율은 중동 전쟁과 외국인 주식 순매도, 달러 강세가 겹쳐 1500원 대까지 높아졌다가 미국·이란 간 임시휴전 이후 일부 하락했고, 국고채금리와 주가도 큰 폭으로 등락했다. 즉 한은이 이번 회의에서 동결을 택한 배경에는 경기만이 아니라 물가, 환율, 금융시장 전반의 변동성이 함께 들어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연준 의사록은 한은의 선택지를 더 좁히는 변수다. 연준이 쉽

게 비둘기파로 돌아서기 어렵다는 신호가 강해질수록, 한은은 금리차와 원화 약세 부담을 더 의식할 수밖에 없다.

로이터가 금융위 직전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이코노미스트 31명 전원이 한은의 4월 동결을 예상했고, 장기 전망을 제시한 30명 중 26명은 연말까지도 기준금리 2.50% 유지를 전망했다. 같은 조사에서 전문가들은 전쟁 발발 이후 유가가 50% 넘게 뛰었고, 원화는 달러 대비 약 4% 약세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한국처럼 원유의 상당 부분을 걸프 지역에 의존하는 경제에선 이 조합이 수입물가와 소비자물가를 동시에 자극할 수 있어, 한은이 환율을 직접 목표로 삼지 않더라도 원화 약세를 가볍게 보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특히 차기 한은 총재 후보자조차 환율과 물가의 결합을 핵심 변수로 보고 있다는 점에서, 시장이 기대하는 ‘빠른 인하 복귀’는 더 멀어질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신현승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는 13일 국회 제출 서면답변에서 “과도한 원화 약세에는 적절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환율 수준 자체가 당장 문제라고 보진 않는다”며 “전쟁 이후 원화 절하 속도가 다른 통화보다 빨랐고 불확실성이 높은 만큼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주형 기자 gh471@

## 집값에 떠밀려 ‘탈서울’… 경기도에 집 샀다

경기 부동산 매수 서울거주자 비중  
지난달 16%… 3년여 만에 최고치

지난달 서울 거주자의 경기도 부동산 매수 비중이 3년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비싼 집값에 전세난까지 겹치면서 서울 거주자가 경기권으로 눈을 돌리며 이동한 것으로 보인다.

13일 직방에 따르면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의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집합건물 기준 경기도 부동산을 매수한 수요 중 서울 거주자 비중은 3월 15.69%로 나타났다. 이는 전월(14.52%) 대비 1.17%포인트(p) 상승했으며, 지난 2022년 6월(16.28%)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서울 거주자의 경기도 매수 비중은 2024년 말 9.32%로 저점을 찍은 이후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직방 관계자는 “수도권 부동산 시장은 서울이 여전히 높은 가격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가격 부담과 금융 규제 환경이 맞물리며 수요의 이동 경로가 재편되는 흐름”이라며 “전월세 가격도 높은 수준으로 임차 부담을 줄이기 위한 실수요의 매입 전환 움직임도 일부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반면 같은 기간 서울로의 유입은 둔화됐다. 서울 집합건물을 매수한 수요 중 경기도 거주자 비중은 2025년 중반 16%대 안팎이었지만 지난달에는 13.76%로 낮아졌다.

서울에서 인천으로의 이동도 변화가 크지 않았다. 서울 거주자의 인천 매수 비중은 최근 약 1.8~2.5% 수준에서 등락을 보이며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다.

직방 관계자는 “경기도의 경우 서울과의 물리적 접근성과 생활권 공유가 가능한 지역이 많아 서울 대체지로서의 선택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며 “인천은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서울과의 생활권 연계성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이고, 지역 내 자족적인 수요 기반이 형성되어 있어 외부 수요 유입에 따른 변동 폭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향후 금리 수준과 대출 규제 강도에 따라 이러한 흐름은 점진적으로 구조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부동산 시장은 자금 조달 여건 변화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시장 흐름에 대한 점검과 함께 변동성 확대에 대비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안상미 기자 smahn1@